

 보도자료	■ 제공일: 2026년 7월 7일
	■ 제공자: 연광훈 부연구위원 전화: 061-820-2193
	■ 배포부서: KREI 성과홍보팀 ■ 매수: 2매 전화: 061-820-2127 ■ 사진:

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가구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맞춤형 농식품 물가 관리 정책 필요”
 KREI, ‘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과제’ 연구 통해 방향 제시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은 「**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과제**」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농식품 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,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-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와 노인 가구, 비근로 가구는 쌀·배추·마늘·수산물 등 생활 필수 식재료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물가 상승기에는 이들 가구의 농식품 물가지수 상승률이 다른 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나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.
-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실제 체감하는 농식품 물가 상승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. 최근 3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, 구매 부담이 큰 품목으로는 사과, 배추, 쇠고기, 돼지고기, 달걀, 치킨, 빵 등이 공통적으로 꼽혔다. 물가가 오를 경우 소비자들은 구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.
- 농식품 물가 상승 원인 분석 결과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식품 제조업 임금 상승도 농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.
- 이에 연구진은 정부의 물가 정책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.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 가격 변동을

조기에 예측하고, 바우처나 할인 지원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- 아울러 연구진은 가구 특성을 반영한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를 정기적으로 산출해 정책 설계에 활용하고, 사과·배추·축산물 등 소비자 부담이 큰 품목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 또한 농식품 유통·가공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, 농식품 기업이 인건비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.